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13. 5. 22

新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안

공공기관연구센터

Kipf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I. 문제제기	1
1. 추진배경	1
2. 여건변화와 진단	2
II. 공공기관 정책방향	4
III. 주요 과제	5
1. 협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5
2. 사회적 책임 강화	8
3. 공공기관의 핵심역량 강화	9
4. 자율책임경영 확립	11
별첨 1.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공론조사	13
별첨 2.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일반시민,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14

I. 문제제기

1. 추진배경

- 공공기관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기, 물, 의료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
 - '13년 현재 공공기관은 총 295개 기관으로 총예산은 GDP의 36%, 정부예산('12년 325조)의 1.4배 수준

- 최근 10년의 공공기관 정책
 - 정책목표: 각 개별 공공기관의 비용 대비 성과 극대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 정책수단: 기관별 비용절감과 성과제고
 - 비용절감: 기관 통폐합, 민영화, 구조조정 등
 - 성과제고: 각 기관별로 사업성과 제고, 대국민서비스 개선, 성과연봉제 등
 - * 대체로 신공공부문관리론(NPM)에 입각하여 추진
 - 추진방식: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을 하달하는 top-down 방식 중심

- 최근 NPM의 대체론 혹은 보완론 대두
 - 새로운 관료제 국가론: 더 전문적, 더 효율적, 시민에 대한 더 대응적인 전통적 정부기구, 공공 제도를 강조
 - Neo Weberian State (Drschler and Kattel, 08; Lynn, 2008)
 - 새로운 공공거버넌스론: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조
 - Neo Public Governance (Pierre and Peters, 2000; Frederickson, '05; Kaufmann 외, '09; Bellamy and Palumbo, '10; Osborne, '10)
 - 새로운 공공서비스론: 시장, 효율성, 고객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민주적 시민성 (democratic citizenship),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와 협력, 조직적 인본주의를 강조
 - New Public Service (Denhardt and Denhardt, 2011)

2. 여건변화와 진단

□ 여건의 변화

- 개별 기업이나 기관의 생산성이 증시되는 경제로부터 국가의 **총체적 경쟁력**이 증시되는 경제로 이행
 - 일자리 확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
-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Web 3.0 등 IT의 발달로 공공기관간 **협업**의 필요성과 가능성 확대
- 공공기관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서비스 공급자도 NGO, 지역사회로 다양해져 **정부의 역할에 한계**
 - 공공기관의 창의성 발현을 위해 **책임경영**을 강화할 필요

□ 현재 공공기관 관리방식 진단

- 그간 **개별 기관**의 비용 대비 성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경쟁이 심화되어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미흡
- 그러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맞춤형, 융합형 등으로 다기화 되고 있어 기관간 협력 필요성은 증대
 - 클라우드 컴퓨팅 등 ICT 발달로 **연계, 협력** 가능성 확대
- 또한 일자리 확대, 사회적 형평고용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상대적으로 소홀
-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협업과 개방**을 전제로 한 **맞춤형 국민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

□ 현재 공공기관의 내부여건 진단

- 그간 **경영효율성, 노사관계** 등 개선되었으나 조직의 불안정성과 노사갈등을 야기하여 **소극적 조직문화** 심화
- 공공기관의 사업확대 과정에서 **부채**가 급증하여 국민경제 부담 우려
 - * 전년대비 부채증가액(조원) : ('09)46.8 → ('10)60.2 → ('11)62.0 → ('12)34.4
- ☞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확립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틀 구축필요

□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

- 기존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방향 하에 추진과제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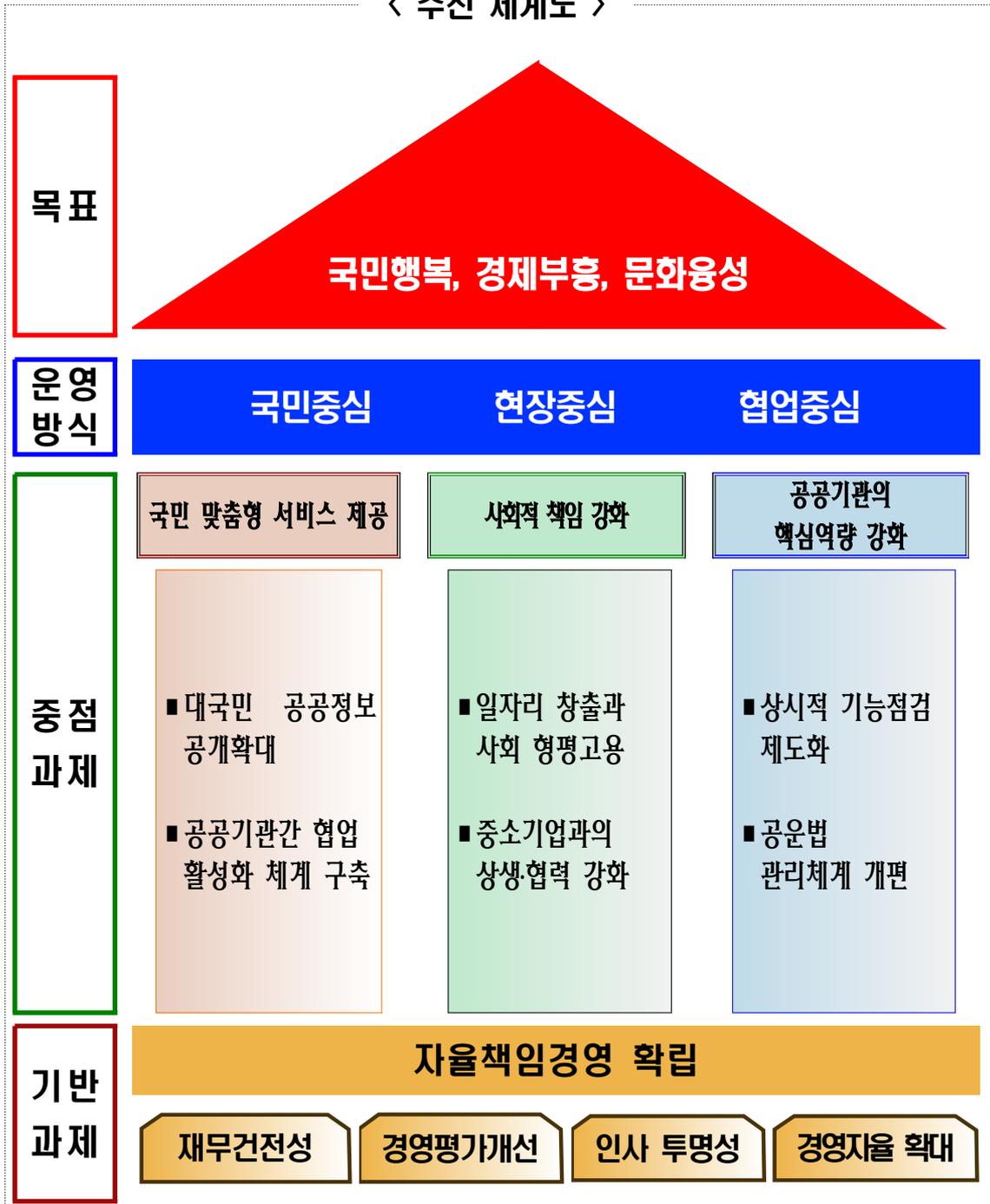
<표 1> 공공기관 정책의 변화방향과 추진과제

	기존의 공공기관 정책	향후의 공공기관 정책과제
정책 목표	공급자 중심의 대국민 서비스 개별기관의 성과/투입 극대화	①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② 사회적 책임 등 공공기관의 총체적 기여 강화
정책 수단	기관별 비용절감 및 성과관리	① 공공기관간 협업과 대국민정보공개
추진 전략	사안별 구조조정 top-down 방식	③ 공공기관의 핵심역량 강화 장치 제도화 ④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확립

* ①~④ 번호는 다음 페이지의 4개 추진과제

II. 공공기관 정책방향

< 추진 체계도 >



Ⅲ. 주요 과제

1.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 대국민 공공정보 공개 확대

□ 3대 기본방향

- 국민과의 **접촉 창구**를 다양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인별 수요를 파악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국민 맞춤형 서비스 추진방향: 택배형, 맞춤형, 융합형 서비스
- **개방성과 쌍방향성**의 확대: 정부가 보유한 정보와 정책결정 과정을 개방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절차를 구축하여 국민과의 **협치**를 달성
- **신뢰구축**: 효과적인 정책홍보와 갈등관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거래비용**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경영평가 등에 반영 검토
- 기관별 더 많은 정보공개를 위해 경영실적, 경영상황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공공기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

□ 개방정보의 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 민·관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방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들의 활용 및 참여를 유도
-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활용하기 편하도록 통합공시 사이트인 알리오를 개편

□ 대국민 소통역량 강화 방안

- 국민체감도 조사를 **국민신뢰도** 조사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 현재 국민체감도 조사는 충실한 사업수행, 사회적 책임이행, 사회적 윤리준수 등 모두 신뢰도와 관련된 개념을 묻고 있음.
- 경영평가와 무관하게 공공기관의 대국민 **소통역량**을 측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주요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방안 검토

□ 고려사항

- 공공기관 정보가 과다하게 제공될 경우 **스팸**과 같은 부정적 효과 발생 우려
→ 개인의 선택 보장 필요
- **결집된 소수**가 전체 시민을 대표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온라인상의 공공부문 정보와 서비스의 **신뢰도** 확보 필요
 - 신뢰도란 콘텐츠의 진실성, 전문성·유용성, 안전성 (개인정보보호와 기술적 시스템의 안전성)을 의미
-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나. 공공기관간 협업 활성화 체계 구축

□ 협업과제 발굴

- 공공기관, 국민제안, 민간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협업과제를 발굴
- 협업 활성화는 정보공유로부터 시작하므로 기관별 공유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수요 조사 실시

□ 협업과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협업사업과 관련된 예산·인력은 공공기관 예산지침, 증원 심의시 우선 고려
- 가칭 **협업점검회의(기재부 주관)**를 신설,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결
 - 분야별·과제별 책임·협력기관 선정, 기관간 책임범위, 추진방식 등 과제별 협업 기초체계를 마련
- 공공기관간 협업은 부처간 협업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므로 **부처**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구할 필요

□ **협업성과 평가 및 환류 강화**

-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
- 협업과제 수혜자가 서비스를 평가하고 이를 **고객만족도** 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추진
- 협업평가결과 높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협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기능점검 등을 통해 조직의 융합을 검토

<표 2> 분야별 공공기관 협업 대상업무 예시

분야	기관명	업무명
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금감원,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개인신용회복 지원사업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보증 및 지원사업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지원
보건 복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등록심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업무 및 고용정보망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정보망 운영
산업 진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표준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경영사업
교육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사업 (해양플랜트전략분야 인력양성)

2. 사회적 책임 강화

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형평 고용

□ 일자리 창출

- **인력재배치:** 정년퇴직 등에 따른 채용수요 발생시, 기능점검을 통해 유망분야 혹은 국정과제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재배치
- **제도개선:** 임금피크제, 대체채용 등을 통해 **채용여력 확대**
 -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여유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
 - 군입대·육아휴직자 대체채용을 활성화
 - 공공기관 사업과 민간고용의 연계성을 강화
- **글로벌 역량강화:**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 **인력증원:** 일자리 수요가 확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증원도 고려
 - 안전관리·보건복지, 컴퓨터보안 관련 인력채용 기준을 마련

□ 사회형평 고용

- 스펙중심의 서류전형과 단순 지식 위주의 필기시험을 지양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평가방안**을 마련
 -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채용토록 청년인턴제도를 보완·활성화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전환기준, 차별해소 등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단시간근로를 활성화 하고 분야별로 여성인력 채용 목표비율을 제시
 - 여성관리자 목표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
- **고졸자 채용확대 및 능력발전** 지원을 위해 기관별로 중장기 채용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관련 인사·보수규정을 마련
-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채용할당제, 채용목표제, 전형 단계별 가점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권고

나.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 사업 단계별 협업을 추진

- 기술개발 단계: 공공기술 개발, 기술이전 및 전수, 신기술 테스트 베드
- 시장진입: 진입장벽 제거, 제한경쟁 확대, 마케팅 지원
- 계약 및 사후관리: 하도급 관리 책임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성과 공유제 확대
-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공동마케팅, 중소기업 컨소시엄

□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관-중소기업 상생협업협의체'(가칭) 구성 검토

- 정부부처, 주요 공공기관,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애로 사항을 취합하고 협업, 업무조정 등을 통한 해결방안 논의
- 우수사례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중소기업 공동으로 우수사례 발표, 사례집 발간, 워크숍 개최 등 추진

3. 공공기관의 핵심역량 강화

가. 상시적 기능점검의 제도화

□ 상시적 기능점검을 통해 협업과제, 기능조정과제 등을 도출

- 기관간 통폐합보다는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중점을 두되, 기능 축소, 유사·중복 조정 등 기능조정도 병행
 - 추진체계: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로 분야별 기능점검 TF를 구성하여 추진하되, 부처협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운위 심의·의결
- '13년중 우선점검 대상에 대한 기능조정(안) 마련
 - 예시: 해외진출이 급속히 증가한 기관, 정보화 분야, 고용지원 관련 분야, 안전점검 분야, 중소기업 지원 등 산업진흥 분야, 잠재적 재무리스크가 큰 기관, 기타 경영평가 등을 통해 기능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기관

□ 시장화 테스트 (market test) 도입

- 공공서비스 공급자 선정시 객관적인 기준·절차 마련
- 대상: 새로운 기능이나 자회사 신설시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 확대
 - * 예시: 급유시설(인천공항), 물문화관(수공) 등 민간과 경합가능성 있는 기능
- 민간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운영하되, 관련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확보

나. 공운법 관리체계 개편

□ 공공기관 지정 및 운영체계의 합리화 추진

- 현재 기타공공기관의 일부는 경영평가 대상이며 대통령 임명으로 되어 있어 지정분류와 관리방식에 불일치 발생
- 기타공공기관 유형을 폐지하고 공공기관을 시장성 및 규모를 고려 단순하게 재분류하는 방안 검토
 - 지정분류가 임명권자나 피평가 대상여부와 일치하도록 개선
- 경영자율권제도와 지정분류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 공공기관 운영에 중기관점의 도입

- 단년도 성과 중심 평가제도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중장기적인 경영시야를 가지기 어려운 여건
- 정부의 5년 단위 중기재정계획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차원의 중기계획 수립을 유도
- 경영평가제도에도 중기관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중장기 경영목표, 인력, 재무관리를 경영평가, 기능점검과 연계

4. 자율책임경영 확립

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 자구노력을 포함한 '13~'17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기관별 재무관리계획의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 자산 2조원 미만인 기관 중에도 재무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도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 부채가 자산보다 큰 경우,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경우 등
-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기채발행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 공공기관 부채구조 개선

- 단기 재무위험에 선제 대응키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여 재무개선이 요구되는 기관의 경우 기관별 별도의 대책 마련 추진

□ 공공기관 사업관리 강화

-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제도** 도입
- 공공기관의 자체 **출자회사** 성과관리 시스템 마련을 유도

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 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부담을 축소하고 기관특성을 충분히 반영

- 평가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평가 주체·주기·방법·결과 활용 방안도 재설계 하여 평가 부담을 간소화

□ 기관장 평가는 「경영성과 협약제」에 기반하여 평가

-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장간에 「기관장 경영성과협약제」를 체결하고 기관장 재임기간 중 1회 이행실적을 평가

□ 경영평가 항목에 새로운 사회적 수요 반영

- 안전, 환경 등 對국민 공공서비스 개선 목표·기한을 설정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평가방법을 신규도입
- 기타 본 보고서의 주요 정책방향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다. 공공기관 임원 인사 투명성 제고

□ 임원의 전문성 제고

- 임원의 직위별 전문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교육 강화
 - *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육으로 개선
- 상임이사와 감사의 임기제를 개선 (예시: 임기를 2년 → 3년)

□ 법적절차의 실효성을 강화

- 임추위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고 그 중 위원장을 호선
- 공운위의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보류, 부결 등 의결기능을 활성화하여 관행적인 2배수 압축방식을 개선

라.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확대

□ 경영자율권 제도의 평가대상을 시장성 기준 등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차등하여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

-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더 높은 수준의 자율권을 부여
- 중장기적으로 경영자율권 적용대상 기관은 기관경영평가를 자율경영평가로 대체하는 방안 추진

□ 경영상의 간섭·규제 최소화로 실질적 자율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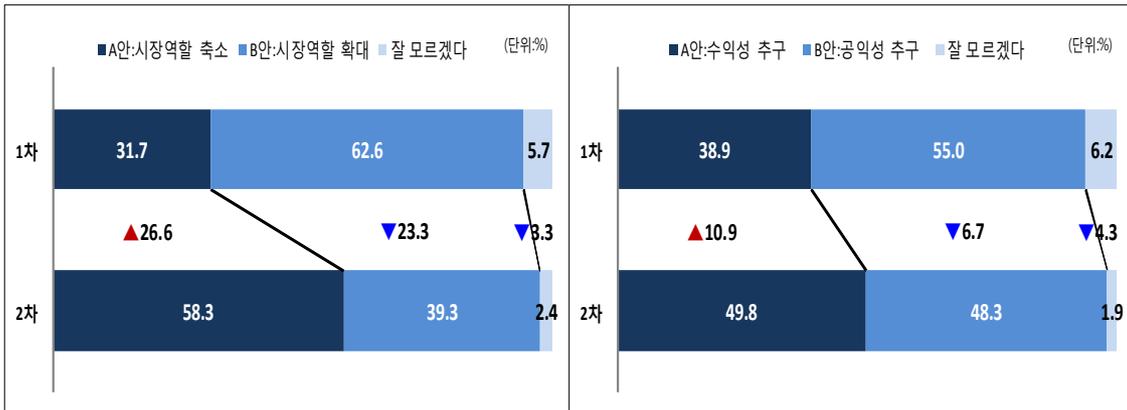
- 공공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의 불필요한 경영 간섭·규제 등을 발굴하고 제도개선 TF 등을 운영하여 정비 추진

별첨 1.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공론조사 (2013. 2.2 시행)

- 토론전후에 같은 설문을 시행하여 비교하는 방식 (국민 200명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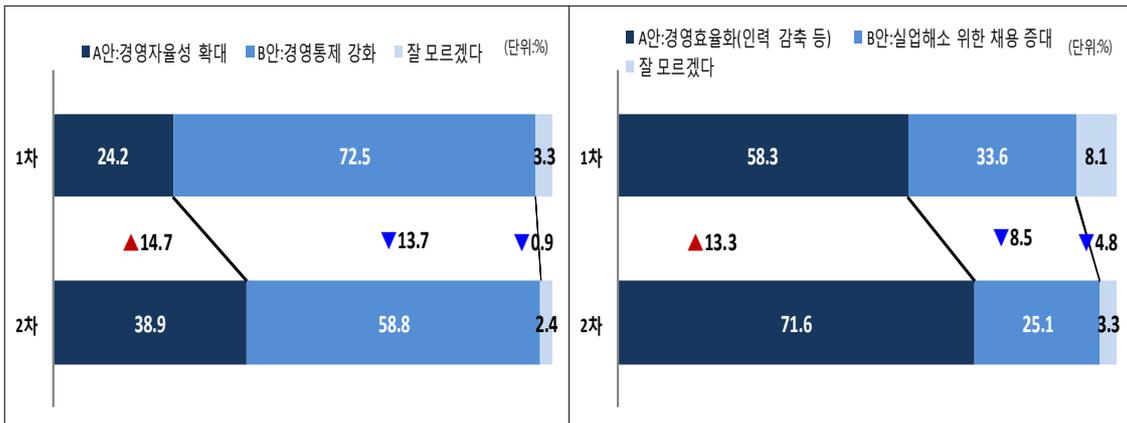
공기업의 시장참여에 대한 의견

공기업의 사업목적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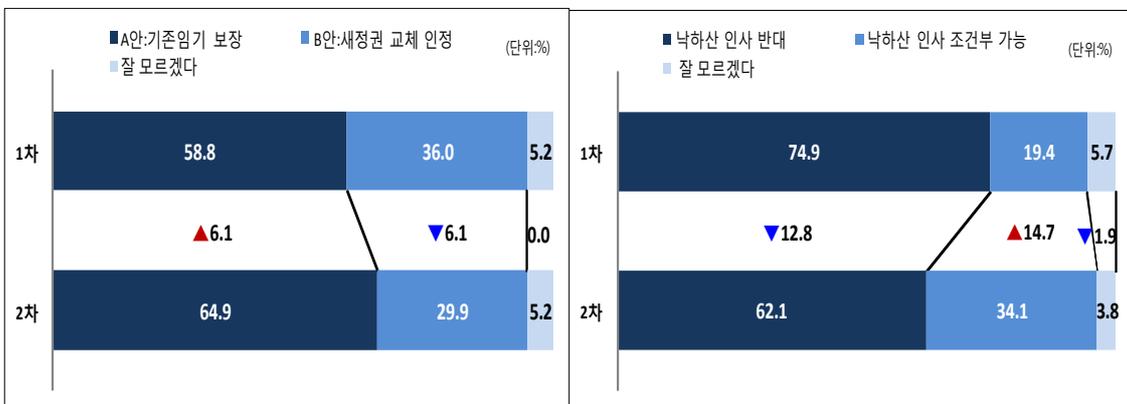
공기업의 통제수위에 대한 의견

공기업의 인력관리에 대한 의견



공기업의 임원 임기에 대한 의견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의견



별첨 2.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일반시민,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시민(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시민 1,000명(유선 332명, 무선 668명), 전문가 117명, 공공기관 종사자 200명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시민: 유무선전화 RDD(임의번호걸기, Random Digit Dialing)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 전문가와 공공기관종사자: 이메일 조사(CAWI, Computer Aided Web Survey)
조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시민: 2013년 4월 29일 ~ 4월 30일 (2일간) ● 전문가와 공공기관종사자: 2013년 4월 29일 ~ 5월 16일 (18일간)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국리서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요약 (문 13~17은 전문가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만 질의) [문 1]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관한 입장 [문 2] 제2철도공사 설립에 관한 입장 [문 3] 산업은행 민영화에 관한 입장 [문 4]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에 민간 사업자 참여를 허용하는 것에 관한 입장 [문 5]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공공기관 합리화 방향 [문 6] 공공기관 성과 증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문 7] 공공기관 방만함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문 8] 공공기관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문 9] 낙하산 인사에 대한 입장 [문 10] 공공기관의 임원인사 방식에 대한 입장 [문 11]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입장 [문 12] 공공기관의 인력운용에 대한 입장 [문 13] 공공기관 간 협업과 정보공유 정도 [문 14]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한 의견 [문 15] 공공기관의 운영방식 [문 16]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량 [문 17] 공공기관의 자율성
--

1) 주민등록인구현황(2013.2월 기준)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문 1] 정부는 현재 100% 정부 소유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중 49%를 장기적으로 시장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떤 입장에 찬성하십니까?

(단위: %)

	정부지분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4조원 정도 소요되는 공항 확장사업을 하는 방안	정부지분을 유지하고 공항 확장사업 자금은 부채로 조달한 후 이를 갚아 나가는 방안	잘 모르겠다	계
일반시민	25.6	47.5	26.9	100.0
전문가	35.9	64.1	0.0	100.0
공공기관종사자	23.5	67.0	9.5	100.0

[문 2] 호남고속철도를 운영할 제2철도공사 설립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입장에 찬성하십니까?

(단위: %)

	공기업간 경쟁을 통해 요금이 인하되고, 부채가 줄어들므로 제2철도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입장	노선별로 독점체제가 유지되어 공기업 수만 늘어나게 되므로, 제2철도공사를 설립하지 말자는 철도노조 입장	잘 모르겠다	계
일반시민	42.2	41.5	16.3	100.0
전문가	54.7	44.4	0.9	100.0
공공기관종사자	42.5	51.0	6.5	100.0

[문 3] 정부는 2009년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 기능을 분리하여 정책금융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산업은행은 민영화 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중 어느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단위: %)

	당초안대로 산업은행을 민영화하여 시중은행과 같이 경쟁토록 하는 방안	산업은행의 정부지분을 유지하여 정책금융 기능도 같이 수행토록 하는 방안	잘 모르겠다	계
일반시민	30.9	54.4	14.7	100.0
전문가	50.4	47.0	2.6	100.0
공공기관종사자	53.5	42.5	4.0	100.0

[문 4] 지금은 천연가스 도입과 도매를 가스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스공사 이외에 민간 사업자를 허용하여 천연가스 도입과 도매에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단위: %)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에 민간도 참여시켜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는 지금처럼 가스공사가 전담하는 방안	잘 모르겠다	계
일반시민	51.6	41.6	6.8	100.0
전문가	68.4	31.6	0.0	100.0
공공기관종사자	57.0	40.5	2.5	100.0

[문 5]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 합리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공공기관이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	공공기관의 방만함을 해소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는 일	공공기관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	잘 모르겠다	계
일반시민	10.4	33.8	52.2	3.6	100.0
전문가	23.1	36.8	40.2	0.0	100.0
공공기관종사자	60.5	6.0	31.0	2.5	100.0

[문 6] 공공기관이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	공공기관간 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공공기관이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	기타	잘 모르겠다	계
일반시민	39.0	15.4	42.0	0.9	2.8	100.0
전문가	48.7	34.2	12.8	4.3	0.0	100.0
공공기관종사자	42.5	32.0	23.0	1.5	1.0	100.0

[문 7] 공공기관의 방만함을 해소하여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구조조정 하는 것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등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것	공공기관의 기능을 민간이 수행토록 하거나 경쟁을 도입하는 것	기타	잘 모르겠다	계
일반시민	32.1	40.5	21.6	0.7	5.0	100.0
전문가	29.9	48.7	19.7	1.7	0.0	100.0
공공기관종사자	14.5	65.5	12.5	5.5	2.0	100.0

[문 8] 공공기관의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 방식을 개선하는 것	공공기관이 회계와 재무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는 것	공공기관이 보유한 DB를 공개하고 국민과 더 소통하도록 하는 것	기타	잘 모르겠다	계
일반시민	15.1	30.0	52.0	0.2	2.7	100.0
전문가	40.2	38.5	21.4	0.0	0.0	100.0
공공기관종사자	57.0	26.5	14.0	0.5	2.0	100.0

[문 9] 권력층이 후보를 미리 내정한 채 공모를 진행하는 인사관행, 즉 낙하산 인사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단위: %)

	낙하산 인사는 공모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근절되어야 한다	낙하산 인사라고 모두 나쁜 것은 아니므로, 부적격 낙하산을 막는 데에 치중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
일반시민	60.5	36.3	3.2	100.0
전문가	41.9	58.1	0.0	100.0
공공기관종사자	44.5	55.0	0.5	100.0

[문 10] 공공기관의 임원인사 방식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단위: %)

	현재와 같이 공모방식을 유지한 채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	공모의 실효성이 없으니 정무직 경우처럼 임명권자가 지명을 하고 검증절차를 거치는 방식이 낫다	잘 모르겠다	계
일반시민	59.5	29.7	10.8	100.0
전문가	74.4	25.6	0.0	100.0
공공기관종사자	54.0	45.0	1.0	100.0

[문11]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단위: %)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채도 감수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부채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일반시민	50.4	39.4	10.2	100.0
전문가	53.0	45.3	1.7	100.0
공공기관종사자	68.0	28.5	3.5	100.0

[문 12] 공공기관의 인력운용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단위: %)

	공공기관은 다소간 여유 인력이 있더라도 일자리 창출에 더 힘써야 한다	공공기관은 여유인력의 전환배치 등을 통해 신규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
일반시민	56.3	37.2	6.5	100.0
전문가	34.2	62.4	3.4	100.0
공공기관종사자	71.0	24.0	5.0	100.0

[문 13] 공공기관 간에 협업과 정보공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①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②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②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③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④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④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⑤ 잘 모르겠다	계
전문가	0.9	9.4	10.3	76.1	12.8	88.9	0.9	100.0
공공기관종사자	2.0	17.0	19.0	68.0	9.0	77.0	4.0	100.0

[문 14]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① 지금보다 대폭 강화해야 한다	② 지금보다 다소 강화해야 한다	①+②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	③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	④ 지금보다 다소 간소화 시켜야 한다	⑤ 지금보다 대폭 간소화 시켜야 한다	④+⑤ 지금보다 간소화 시켜야 한다	계
전문가	26.5	28.2	54.7	23.9	18.8	2.6	21.4	100.0
공공기관종사자	1.0	4.5	5.5	11.5	37.0	46.0	83.0	100.0

[문 15]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 방식은 다음 중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현재 공공기관은 중장기적 성과보다 단기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은 단기성과와 중장기적 성과 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은 단기성과보다 중장기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잘 모르겠다	계
전문가	88.9	11.1	0.0	0.0	100.0
공공기관종사자	83.0	15.5	0.5	1.0	100.0

[문 16]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량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① 매우 과한 편이다	② 대체로 과한 편이다	①+② 과하다	③ 적당 하다	④ 대체로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④+⑤ 부족하다	계
전문가	0.0	6.0	6.0	25.6	57.3	11.1	68.4	100.0
공공기관종사자	5.0	18.5	23.5	55.0	20.5	1.0	21.5	100.0

[문 17] 공공기관의 자율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위: %)

	① 매우 과한 편이다	② 대체로 과한 편이다	①+② 과하다	③ 적당 하다	④ 대체로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④+⑤ 부족하다	계
전문가	1.7	11.1	12.8	13.7	63.2	10.3	73.5	100.0
공공기관종사자	0.5	0.5	1.0	10.5	50.5	38.0	88.5	100.0